

‘최악홍수’ 전남 산지 태양광 845곳 중 산사태 한 곳도 없다

전남도, 집중호우 쏟아져도 태양광시설 산사태 없어

“산지 태양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 15도 이하로 강화”

산사태 원인을 둘러싸고 태양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난 전남지역에서는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단 한 건의 산사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해남 493곳, 강진 73곳, 고흥 69곳, 장흥 51곳, 순천 37곳 등 14개 시·군에서 845곳이 운영되고 있다. 면적으로는 전체 1450ha 규모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를 키웠다는 논

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지역은 지난 5~9일까지 내린 폭우에 태양광시설이 산사태를 일으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곡성군은 5곳의 산지 태양광시설이 있으나 산사태 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해가 커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한 화순군과 장성군도 산지 태양광시설이 각각 7곳, 5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함평군 대동면의 한 태양광시설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곳은 산지가 아닌 잡종지에 설치한 시설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에 광양 3곳, 영광 1곳의 산지 태양광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복구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특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양광시설 설치 초기에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이었으나 지난 2018년부터 15도 이하로 강화했다”면서 “산사태가 날 만한 곳을 피해 허가해 주고 주기적으로 산지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드림천에너지를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말로만 공판중심주의? 전담부서도 없는 제주지검

강간 혐의 중국인 무죄 되기도

형사 공판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외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부 기능 강화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담부서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2020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공판부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곳은 제주지검을 비롯해 전주·청주·춘천 등 4곳이다.

공판부가 없는 제주지검은 형사3부에서 공판에 대응 중이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6명, 검사직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형사3부는 3명의 검사가 공판 업무에 배정됐다.

대부분 초임급 젊은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업무까지 과중돼 공판 대응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제주지법 법정에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공판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자 심리 중인 판사가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

해당 판사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징역 1년6개월 구형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징역형을 구형한 공판검사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발부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이미 징역형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 판단한 사안에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구형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초 제주지법 합의부 재판에서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이 재판 도중 본국으로 출국해버려 유죄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 진술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공판검사의 안일한 공소유지 태도를 비판했다. ‘별도의 공판 전담부서가 없다는 지적’에 제주지검 관계자는 “입법조사의 보고서는 제주지검에 공판부가 별도로 분리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며 “검찰에 공판 검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3부에 공판전담 검사가 있다”며 “공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공문을 보내 공판부 조직 확대 및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개 재판부에 1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이슬 기자

청탁성 금품수수 서대석 서구청장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공소사실 모두 유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공무원에 대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혐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업설명회나 승진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죄질이 불량하

다. 다만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 원을 명령했다.

서씨는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고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 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정승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별정직 5급)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형(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장은 “정보주체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

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하면서 이들이 문건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 주체와 합의해 정보 주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코로나19 16번째 확

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입수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서를 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유나 기자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